

제2회 충남 사회적경제 포럼

—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

 일 시 : 2018. 9. 20.(목) 14:00

 장 소 :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제2회 충남 사회적경제 포럼

-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 -

□ 행사 개요

- (일 시) 2018. 9. 20.(목) 14:00 ~ 17:00 (3시간)
- (장 소)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
- (발 표) 이은애 센터장(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충관 사무처장(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 (주 최) 충남연구원

□ 세부 일정

진행 흐름		
14:00~14:05	05'	개 회 사
14:05~15:05	60'	주 제 발 표 □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 • 이은애 센터장(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수원시 지속가능재단 사례 • 김충관 사무처장(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15:05~15:20	15'	휴 식
15:20~16:50	90'	지정 및 종합토론 [좌장] 김혜경 상임대표(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지정 토론] • 박찬무 이사장((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김종수 센터장(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16:50~17:00	10'	마무리 및 폐회(사진촬영)

발표자료

[제2회 충남 사회적경제 포럼]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

이 은 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추진 현황 및 도전과제

이은애(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I. 추진배경

□ 로또나 암호화폐가 아니라 ‘협동과 공유’로 희망 복원 필요

-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OECD 33개국 중 소득분배 불평등지수 상위 5위, 사회갈등지수 3위, 사회 자본지수 29위를 기록함.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실질가구소득이 8분기 연속 감소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나 사회통합을 촉진할 신뢰자본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과 같이, 낙후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권 단위 지역경제 복원과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 등 포용적 성장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시기임.

□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생활민주주의로 확산할 시민경제 필요

- 한편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시민참여 의식으로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성공시킴. 공적 영역에서 분출되었던 시민의 힘이 이웃과 사회적 우정을 나누는 생활민주주의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생활경제 혁신이 필요함.
-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직장에서 불평등·불안·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우정에 기초한 시민경제가 확장되도록 사회적경제의 주류화전략 필요.

□ 새로운 커뮤니티의 창설 뿐 아니라 성장기 조직을 통한 규모있는 사회변화로 시민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자조기반 확충 필요

- 지난 6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청년 등 커뮤니티를 통해 최소 3~45만명¹⁾의 시민이 등장함. 소규모 신설조직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이나 시민주도의 공유자산망 확보에는 역량이 미약한 상태임.
- 한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공유자산화·시민보험사 주비위 발족 등 자조기반 확충의 중요성을 인지한 성장기 혁신조직들의 새로운 도전이 증가중이며, 민선7기 ‘5% 시민숙의예산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을 통해 분야와 지역을 뛰어넘는 규모있는 통합적 실천 전략도 강화될 전망임.

1)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 종사자 2만명- 출자·소비조합원 32만명, 마을공동체 13만명, 청년 5천명 등

II.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1.0 성과

□ 서울시 사회적경제 1.0 통해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패러다임 선도

- 지난 6년 간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한시적 재정지원 정책의 한계를 혁신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을 선도적으로 개발, 실행함.
- 즉, ‘시민의 주도적 참여로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과 커뮤니티별 순환경제가 정착되도록(목적) 다양한 사회주체 간의 연대와 공동책임하에(원칙)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과제)’ 한다는 기조하에 사회적경제의 4대 공유자원망 (협동사업망, 인재, 사회적금융, 판로)를 구축에 노력해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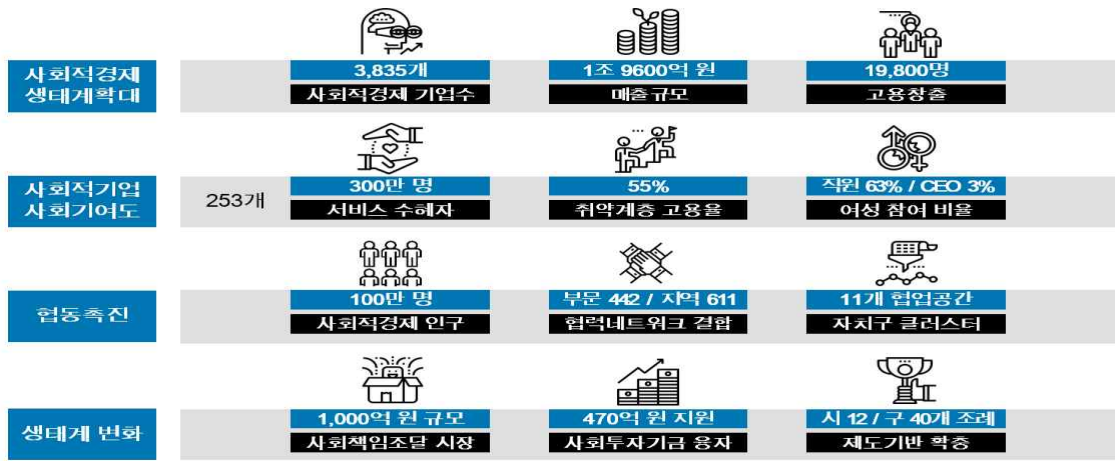


- 문재인정부 및 경남·제주·강원·경기·광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대한 벤치마킹이 지속됨. 새정부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조직운영은 다양한 과제제시에 불구하고 ‘협치와 분권’ 미흡, 과잉대표성, 성과없는 자문기구 였다는 비판이 존재함

□ 지난 6년간 예산감액 30%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수가 5배로 성장하고 매출 및 고용도 2배 이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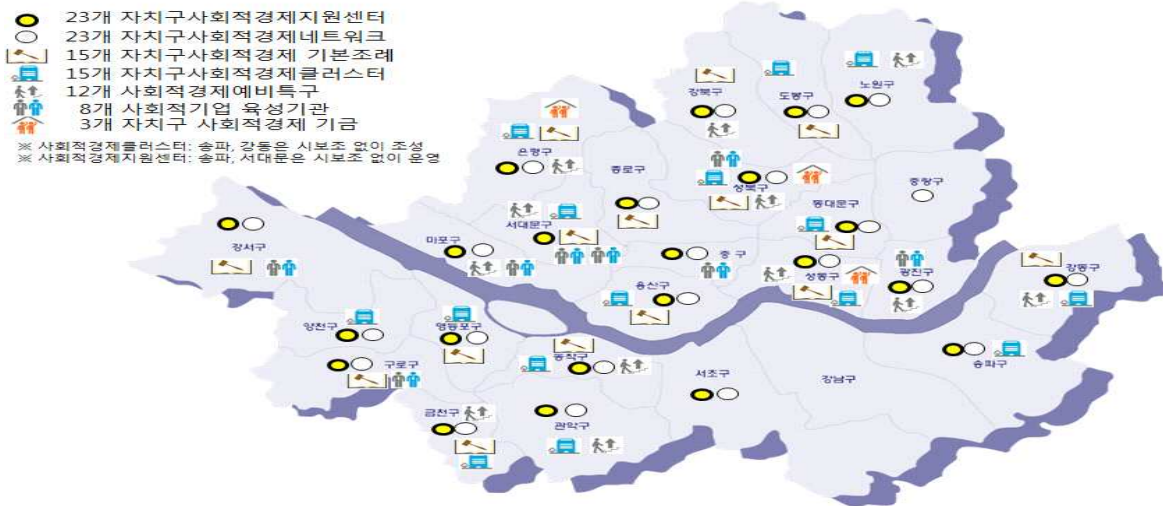
- 2017년 초 기준, 서울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3,835개소, 고용 19,800명, 매출 1조 9600여억원 수준으로 성장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재화·서비스 사회책임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 사회책임조달조례’ 제정(2014년)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규모가 2011년 (116억 원) 대비 10배 이상 확대 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모태가 됨.

<그림2>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 (2017년 2월 기준)



- 지역간 불균등 발전 문제에 대응할 사회적경제의 지역화전략을 추진하여,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및 지역의제 사업 활발
- 중랑·강남을 제외한 23개구에 자치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및 지원센터가 설치됨. 또한 15개구에 사회적경제 협업단지가 조성되고,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지역내 사회적경제들이 연대하는 사회적경제특구 사업도 12개구에서 추진됨.

<그림3>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 (2018년 8월)



- 사회적경제로 도시혁신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및 민간협의체들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도 활발하여 글로벌사회적경제포럼(GSEF)을 운영중이며, 총 276개 도시조직 내방
-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공공의존도를 줄이고, 자조적인 상호부조의 원리를 실천해 나갈 공유자원망 구축 개시

- 서울시가 조성한 사회투자기금 526억원 외에 민간 사회적금융을 통해 17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임. 이외 사회적기업공제기금(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누계액 40억원), 사회혁신기금(사회혁신금융, 누계액 2억원), 자활공제(전국주민협동연합회, 누계액 47억원) 등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해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자구적 노력도 이어짐.
- 또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며 시민자산화를 추진하는 시도도 나타남.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공유자산 조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서 공유자산 형성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4) 광진구 협동경제네트워크 시민자산화 사례

- 소재지: 광진구 중곡동 (지하1층, 지상4층)
- 매입비용: 36억원 (10억원 자기조달, 사투기금 2억원 등)
- 입주기관: 광진주민연대, 행복중심 광진생협, 주거복지센터, 더불어내과의원, 사회적기업 도우누리, 자활기업 카페 15개 단체 입주
- 임대료: 주변 시세의 40% 수준
- 효과
 - '지역돌봄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을 추진중인 바, 지역자산화 공간을 거점으로 돌봄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내 생애주기별 복합돌봄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며 지역혁신바우처 등 건인 구상
 - 매년 1~2개 지역자산화 추가 추진 결의함. 사회투자기금 통한 장기고액 융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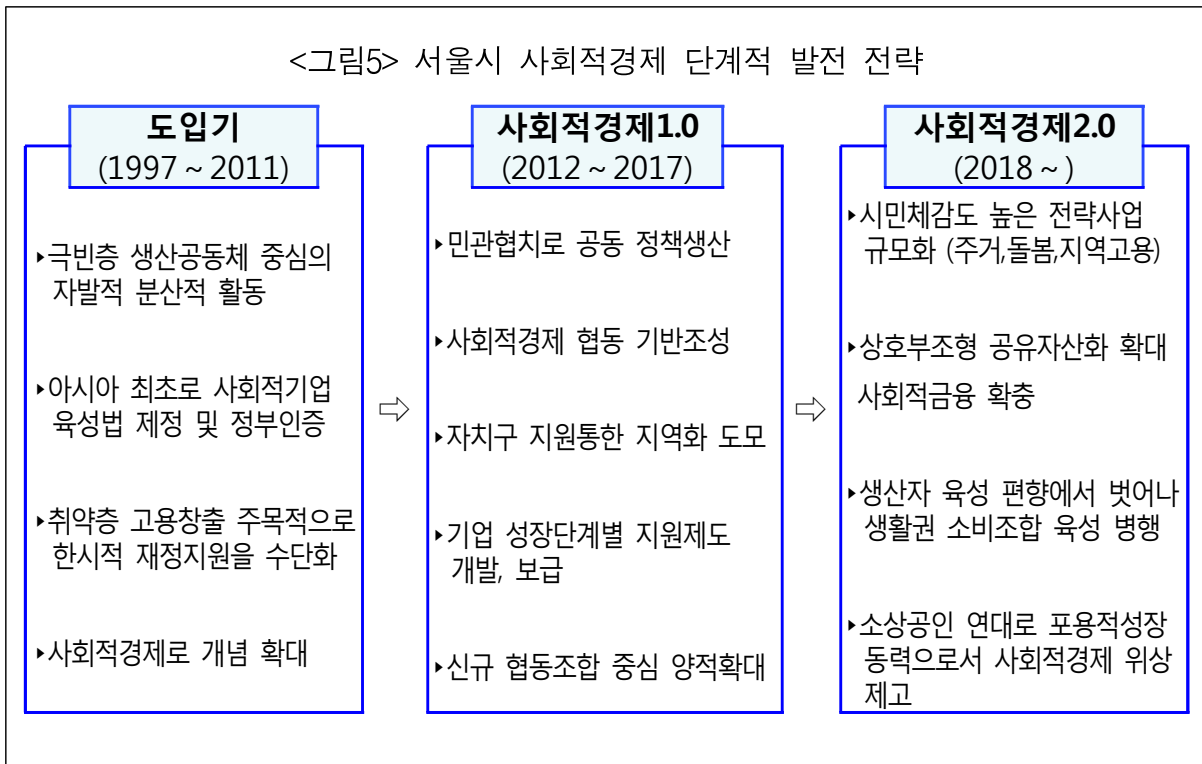


- 서울시 민관협치 우수사례로 '서울 사회적경제 민관 정책협의회'가 자리 잡으며 숙의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책의 공동생산 및 예산 공동수립 지속
- 2011년 말부터 시작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및 민간 지원조직 간의 연대활동과 서울시 행정과의 거버넌스가 정착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됨
- 국회 사회적경제포럼 및 정당별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건인, 총선 및 지방선거시 사회적경제 매니패스트 활동 주도,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및 지방의원협의회 설립 건인 등 정치적 환경 조성도 추진
- 반면 자치구에서 민관협치의 구조나 문화 형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광역차원의 지원이 필요

III.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2.0 (개요)

-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인구가족 구조의 급변으로 인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시민주도의 순환경제를 확장하고,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공유자산을 확충하여 서울의 포용적 성장 동력 제고

<그림5> 서울시 사회적경제 단계적 발전 전략



- **사회적경제 시민체감 제고** : 사회주택·지역밀착형 돌봄·저층주거지 지역관리기업·청(소)년 소셜벤처 등 시민체감 높은 전략업종의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설립으로 규모화 추진하며, 새로운 마을경제 조직으로 위기의 생활상권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상권 시민 프랜차이즈’ 설립 추진
- **커뮤니티 자산형성 주도** : 도시재생지 앵커시설 등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확대 및 상호부조형 공유자산(매입형 공유사옥, 공제조합 등) 확충
- **공동주택 생활경제공동체 1만호 육성** : 공공임대 관리사업 확대 및 아파트·저층주거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생활경제공동체 1만호 육성
- **생태계 조성전략 지속 병행** : 자치분권에 기초한 기반조성을 지속 지원하며, ‘5% 시민숙의예산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참여 등 통해 민민·민관 협치 강화
- **미션별 지원제도로 개편** : 중앙부처의 조직유형별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경제의 미션 특성별 지원체계를 도입

IV. 민선 5-6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원칙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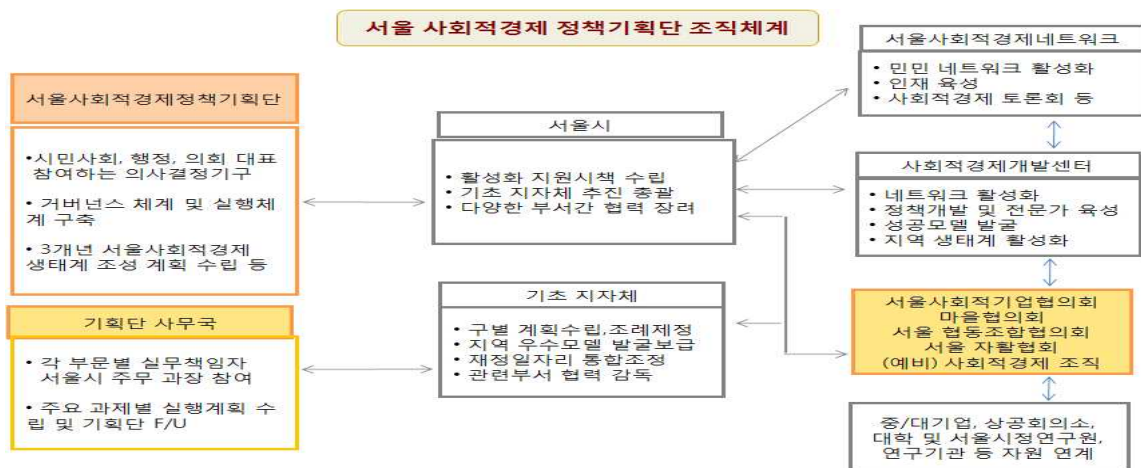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제고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에 있어서 서울시 및 서울 사회적경제계가 추구해온 전략은 ‘시민사회 자조와 협동 역
량 강화’로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시민사회 안에서 우선 해법을 찾
고 부족한 부분을 공공이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과 시민들의 주도역량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기업과 민간전
문지원조직 간의 민간협의체의 성장을 촉진하되, 서울시 지원정책 싱크탱크이자 민민·
민관 협치를 촉진할 ‘관설민영형 지원센터’ 위상 부여함

1. 사회적경제의 다자간 협치체계 구축 통해 부족한 시민역량 보완

2011년말 박원순시장의 취임 직후 ‘사회적기업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수요자
이자 확충자로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물론 민간지원조직과 공공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는데 합의함. 이에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개발과 합의
제에 기초한 추진원칙을 강구하게 됨. 2012년 3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 사회적경제TF’
로 운영되나, 민관 공동결정권이 없이 자문위원회 수준에 그쳐, ‘충남사회적경제정책협
의회’ 운영경험을 벤치마크한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를 서울시장에게 직접 제안, 합의
함. 민관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동 정책생산과 합의제 예산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서울
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 (현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이 서울시 민민자치와
민관협치 체계의 핵심구조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그림 6)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기획단 체계 제안 (2012.7 이은애)



지난 7년에 달하는 협치과정 및 중요 주체의 등장기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2012년 5월말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립과 2012년 9월 민선5기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10대 과제 시장숙의,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2013.4 조례개정 통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개칭) 에 대한 민간협력형 위탁 추진, 매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신규

정책개발 및 예산합의 등을 실천중임. 2013년 1월 서울사회적경제센터 개소 이후 정책협의회의 정책개발 기능은 이관되어 월례회의 수준으로 안착됨

(그림 7) 서울시 사회적경제 협치 과정



2.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과 ‘거버넌스형 공동위탁’ 모델화

2013년 1월 개소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섹터별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부문조직별·지역별·업종별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네트워킹은 물론 25개 지자체에 산재한 민간 중간지원조직들의 네트워킹과 업무협력을 기획·조정하는 허브이자 서울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복합기능을 수행해 옴.

서울시는 2012년 1/4분기중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밝히며, 센터 설립을 민간에 제안함. 이 때, 검토된 **설립체계는 4가지였음**. 1안) (서울시 경제정책의 거버넌스형 총괄기구) **희망경제위원회 산하 상설 집행기구로 센터 설립, 민간위원 가장 선호했으나 조례개정 등 행정처리 애로로 미추진** : 유사 사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상설 사무국(조례 제3984호, (2002.3.20개정)에 따라 3개 위원회(서울의제 21 실천협의회, 지속가능성발전위원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 및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업 및 예산집행권을 발휘 2안) **서울 소재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의체를 신설 법인화하여 민간위탁, 현재까지 추진체계임** 3안) (기업회원들이 지원 전문성 부족과 조직운영 책임 호소하여 제기된) **민간 지원기관 간의 컨소시엄에서 민간위탁 방안, 기능별 협력은 가능하나 이해관계 조율할 구심체가 부재할 경우에 책임성 문제 발생할 소지 있어 제외함** 4안) **서울시 출연조직(재단) 형태로 센터 설립하고 재단 이사회에 민간협의체 등 공동참여 구상함**, 민간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과 시의회 이해부족 인한 승인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함.

1안)을 가장 최우선으로 교섭하였으나 희망경제위원회 조례 제정 등이 지연되는 가운데 2안)으로 추진된 것임. 또한 거버넌스형 신설법인이 센터를 위탁시, 회원조직인 전문지원조직과 업종별 리딩기업 등에서 시니어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법인의 운영비용

을 공동책임지기로 결의하였으나, 영세하 조직 조건 등으로 책임있는 모법인 운영에 한계가 지속됨.

이에 현재까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청년수당지원·도시재생·혁신파크 운영 등 ‘서울시 사회혁신 분야 신설 영세 위탁법인 리스크’가 이어짐.

결국 2014년 상반기, 민선 6기 개시 시점에서 1)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청년·혁신파크 운영 총괄할 서울시 출연재단 설치를 서울시장에 요구하자는 제안이 제기되고 2) 행정적으로 사회혁신 분야를 아우를 ‘사회혁신국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3) 민선5기에 사회혁신국이 총괄하지 않던 사회적경제를 경제진흥실에서 사회혁신국으로 이관하고, 사회혁신국 내에 청년과를 신설하는 행정조직 개편방안이 협의됨.

그러나 실제 2안만이 현실화 됨. 주된 사유는, 사회혁신 출연재단에 대한 서울시정과 의 공감부족, 사회적경제계 반발 (경제혁신 위한 존치 중요, 중앙-광역-기초 행정라인 무시한 편의적 이동시 지속성 우려 등) 등이 있었음.

3.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과 민간지원체 간의 민민네트워크 형성 추진

2013년초 사회적경제 부문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간 교류·신뢰가 부족했고 당사자협의체들의 회원 조직화율(10.2%)도 매우 낮았음. 이에 서울센터에서 당사자협의체 기본활동 지원을 6년간 추진중이며(6년 누적 10억원 지원), 자치구별네트워크 구축과 클러스터 조성 지원(6년 누적액 300억원이상 서울시 지원), 당사자협의체 주도의 협동화사업 및 사회적경제특구 지원(누적 100억원), 업종선배에 의한 peer consulting 등을 추진함. 최근 협의체 조직화율은 휴면협동조합 제외시 약 50%로 향상됨

V. 민선 7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관련 공리

1. 서울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및 7개 중간지원조직간 성찰적 평가 진행중

○ 지난 6년, 서울 사회혁신 주체의 양적성장 및 박원순리더쉽과의 공조 통한 정책혁신 주도하여 새정부 포함한 국내외 정책변화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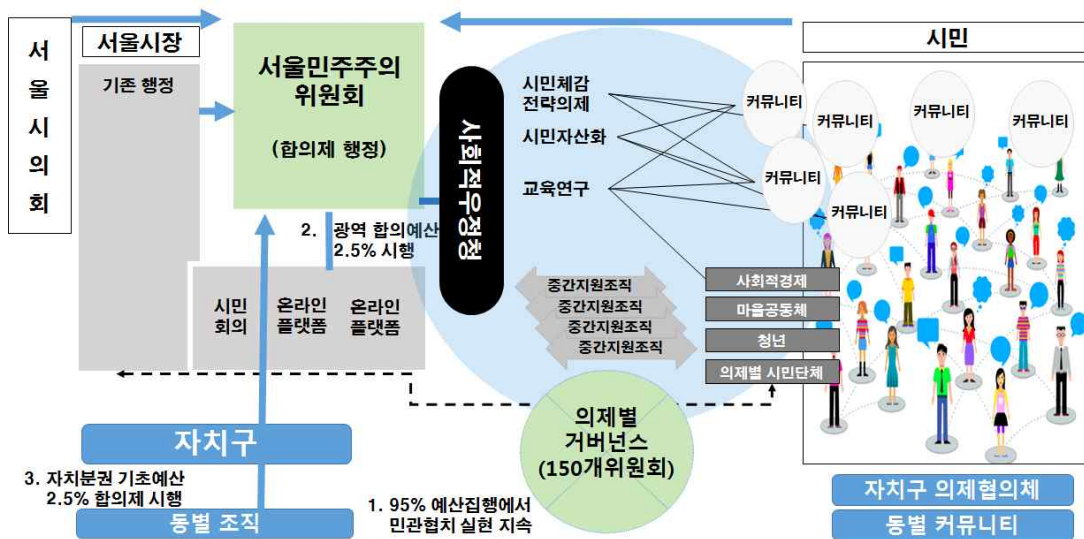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찾아가는동복지, 마을민주주의를 이끌 주민자치회 재구성, 청년허브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수당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링 및 관계망기반 생태계 조성, 시민자산화 실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단계별 주민참여전략행, 은평사회혁신파크를 포함한 사회혁신 거점 조성 등 서울시의 다양한 사업들이 주목 받았고, 전국형 복제·변이 모델이 출현중

즉, 지난 6년간 서울의 사회혁신 관련 정책변화와 주체등장 촉구(input)는 이루어진 반면 사회혁신 분야간의 융합과 상호부조적 연대기반 형성(output)은 이제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시민 생활문제 해결등 사회변화(outcome) 영향 미약

2. 새로운 문제해결 과정으로서 혁신은 (가치, 수단, 주체, 이해관계 등의) ‘융합’에서 나옴.
이를 위한 조직구성과 인적교류, 정보교류, 참여플랫폼등 구상

민선7기 공약인 합의제 행정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재생·청년·마을 등 융합실행&공유자산 추진단(가칭 사회적우정청) 제안하고, 구체화 논의중

민선7기 서울시 협치혁신 구조개혁(안)



- 다양한 시민의 ‘등장과 참여’ 촉진 지속 ; ‘민주주의서울(재정민주주의)’과 연계
- . 센터가 등장시킨 주체(시민/주민/NPO/사경/혁신/청년/마을)의 사회문제해결 요구들을 정책과 공론/숙의를 거쳐 ‘민주주의 서울(재정민주주의)’와 ‘시예산 5% 시민 결정’ 정책과 연계함. 이때 중간지원조직은 기존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통한 95% 예산의 시민참여와 합의제 실천하며 부문별 커뮤니티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함.
- . 사회적우정청 구성시 혁신기획관실 소관업무를 초월하여, 마을·청년·복지·건강·문화·사회적경제·재생 등의 분야별 협력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분야별 시민참여위원회를 연결하여 광역의제사업을 공동기획, 조율하도록 운영 제안함
- . 사회적우정청이 향후 재단으로 전환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나, 정부출연형과 민관합자형 민간재단형을 두고 이견과 가능성 검증기 필요로 함

○ 사회혁신의 지속성 위한 ‘호혜적 상호부조형 공유자산(금융·공간등)’ 촉진

- 유럽이나 미국에서조차 내생발전전략을 “자산기반 발전”(asset-based development) 강조함. 교량적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하는 공유자산 (금융, 부동산, 사업시스템 등) 형성에 민간주도시에 지원 강화 필요
- 사회혁신 생산자에게 한정되었던 주체범주를 사회적·윤리적 소비자운동, 자산가네트워크, 투자자운동 조직화 통해 건강성과 지속성 제고

○ 중간지원조직2.0 전략 논의 시작

- 올해 상반기 7센터(사경/마을/청년/청년수당/재생/NPO/혁신) 논의 지속
- 새정부 중앙-광역-기초 지원체계 대한 자치분권적 정책대안 가시화 미흡, 대응 필요
-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중앙 사회적경제진흥원 비대화와 이를 위한 예산부처로 주무부처 변경’에 끌려다닌 지난 4년의 성급함과 편협한 이해관계 내려놓기가 필요
- .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낙후지역에서 오히려 기초 지자체장의 정책이해 부족과 의회 견제, 낮은 재정자립도 등의 걸림돌이 작동함. 광역 및 기초, 업종과 전문적 기능별 지원체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매칭 지원체계 등 합의 필요
- 사회적경제와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체계 연계방안 검토 필요

발표자료

[제2회 충남 사회적경제 포럼]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사례』

김 충 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무처장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201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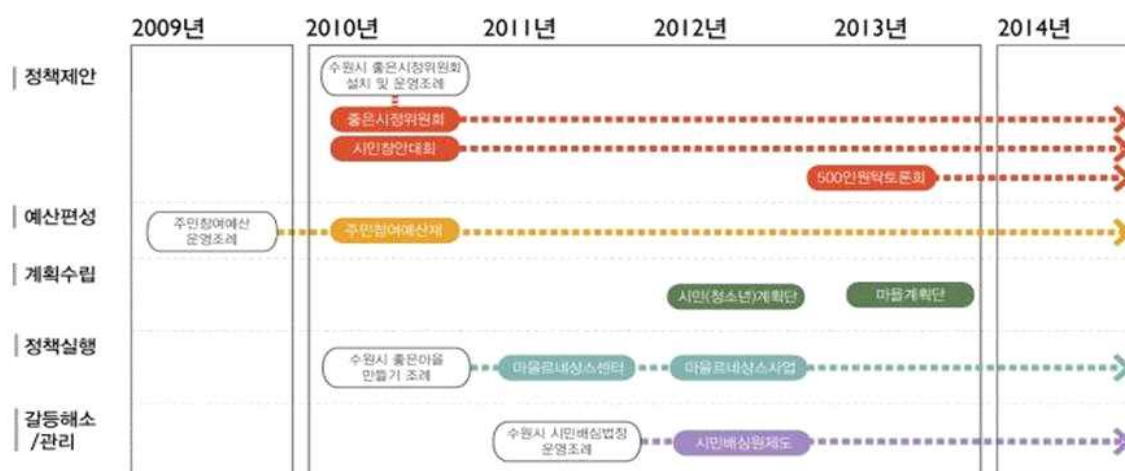
김충관 사무처장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Suwon Sustainable Cit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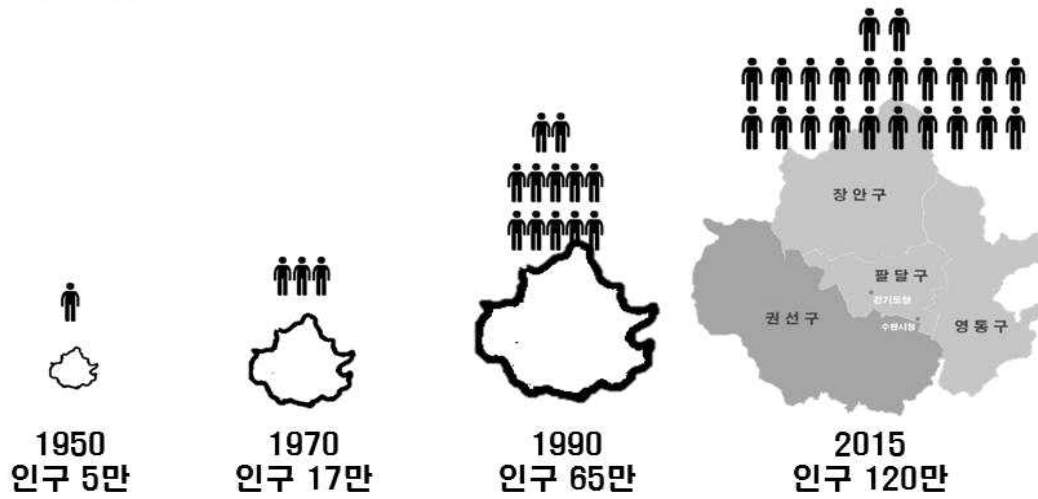
지방자치 민선5기 이후 행정의 변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거버넌스, 협치의 시대 도래 - 협치형 제도 및 정책의 수립, 추진



수원시 성장과 성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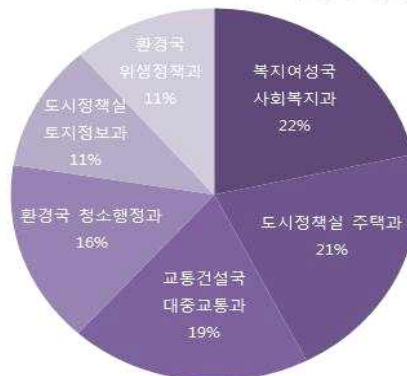
3

시민의 공공서비스 요구 증가

125만 시민의 공공서비스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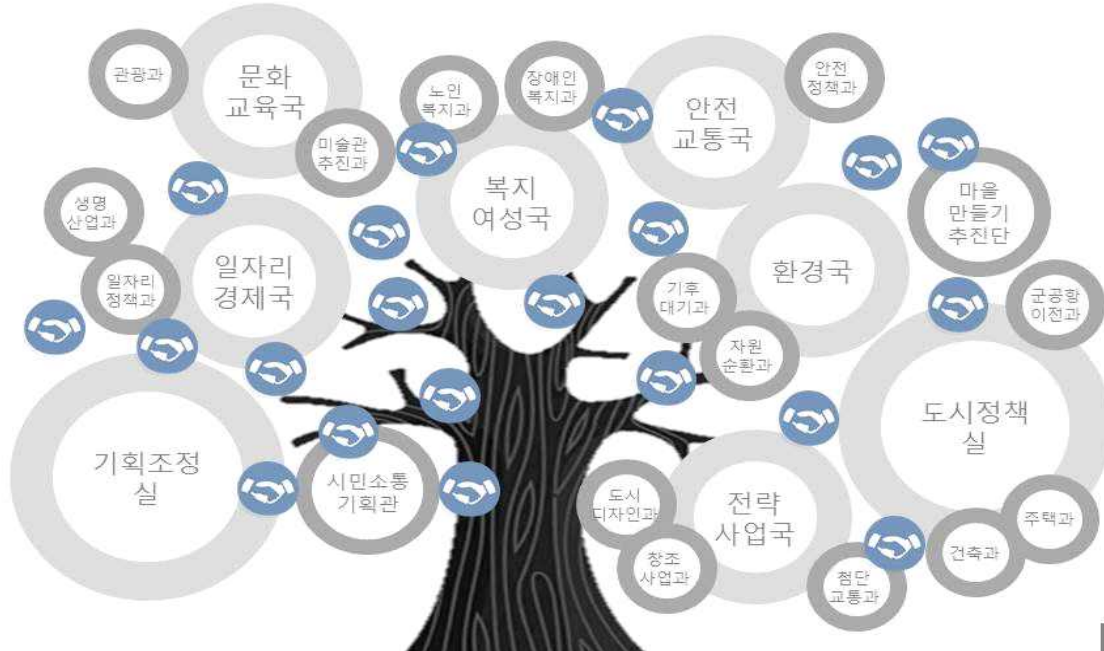


수원시 상위 분야 민원 (제증명 제외)
수원시 시민봉사과, 2014



4

공공서비스 공급 (행정조직+민관거버넌스)



5

공공서비스의 다양화와 복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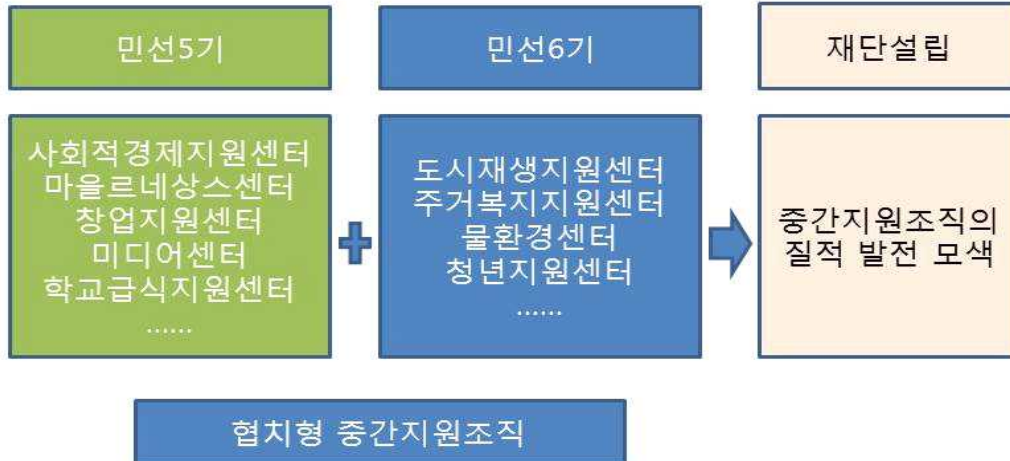
도시문제 복잡성



6

민선5기, 6기 협치형(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확대

풀뿌리 주체들의 역량강화와 활동을 지원하며, 공공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상호 연계, 조정역할이 필요해짐. 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 조직들이 설립, 확대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추진



지속가능도시재단의 가치

수원 지속가능도시재단은



경제적 효율성



생태적 지속성



사회적 형평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지속가능도시를 추구

지속가능도시재단 소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비전과 목표



재단 조직구조(1팀 7센터)



11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추진 경과

일정	추진 내용
2015. 01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토론회 개최
2015. 03~07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2015. 07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재단설립 타당성 사전설명 도시재단 설립관련 시민단체 방문·도시재단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015. 08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추진계획 보고(수원시장)
2015. 09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2015. 10	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심의
2015. 10~2016. 01	경기도 사전협의
2016. 01~02	도시재단 관련부서 조례(안) 및 정관(안) 협의
2016. 02	조례(안) 제정 계획보고, 조례(초안)심사 및 협의, 조례(안) 심사 및 결과보고
2016. 02~03	조례(안) 입법예고

12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추진 경과



일정	추진내용
2016. 03	조례(안) 및 도시재단 추진현황 시의회 사전설명
2016. 0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16. 04	재단설립 관련부서 및 기구 구성원 워크숍
2016. 05	조례(안) 시의회 상정 및 심의, 의결
2016. 06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2016. 07	법인허가 및 법인등기, 세무서 신고
2016. 08	기본재산(1억) 출자
2016. 08	재단 임직원 채용공고
2016. 08	제1회 이사회 개최(운영규정 의결)
2016. 10	재단개원 및 헌판식
2016. 12	비전선포식

13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2년간 성과



구분	사업 내용	추진상황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사업 지원	현장지원센터및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경기도 도시재생공모사업 지원	현장지원센터및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창업지원	세대융합창업캠퍼스 공모사업	주관기관 선정(3년간 총 63억)
사회적경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선정, 운영(80백만원)
	지역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업비 지원 공모 다수	컨설팅 및 사업 지원
공간	청년, 사회적기업, 긴급주거 마을사랑방 23개소 - LH와 업무협약 시 위탁시설 3개소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및 위탁운영
정책	정책동아리 구성 운영	시책사업 연계하여 사업화 및 협치 운영

14

민간위탁과 재단

구분	직영 또는 민간위탁	재단
법률 규정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조례	민간위탁 관련 조례	재단의 설립, 운영 관련 조례
예산	행정부서의 사업비, 보조금 심의 (결산후 반납)	출연금 (결산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조직	사업의 목적에 따른 사업비 근거	자율성과 독립성(사전승인 필요)
운영	행정부서의 관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인력	계약직	정규직
문제점	사업의 지속성 및 조직의 안정성 미흡	운영 규정 등 업무처리의 복잡화

고맙습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사람중심, 지역중심, 자치분권의
 융복합업무를 수행하는 **협치형 집행기관**으로서
 지속가능도시 수원을 선도합니다.

토론자료

[제2회 충남 사회적경제 포럼]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주)즐거운밥상 』

박 찬 무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주)즐거운밥상

박찬무(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들어가며

- ▶ 뭐든 만병통치약을 찾기란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며, 습득한 지식은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더디지만 조금씩 발전 하는 것 같습니다.
- ▶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 재단설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입니다. 사회적경제 3법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긴 하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환경, 지역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와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의 조그마한 모임들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의 정의

-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義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출처] 2018년 민간위탁 교육 - 오산시청|작성자 브릿지킴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²⁾

- ▶ 행정을 제외한 조직은 모두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경제 지원 분야에서의 역할 (고재경, 2012; 마상진, 2011; Compass, 2004등 참조)

- ▶ 지역 단체에 대한 지원서비스기능
 -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정부 기관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
- ▶ 역량강화 기능
 - 특화된 기술, 전문성, 지식, 네트워크, 영향력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부문,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기능
- ▶ 대변인 기능
 - 자금을 제공하는 기구나 정부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요구를 옹호하는 기능
 -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 대변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개선 촉구

2) 단국대학교 지연연구소·I-다산 Link + 사업단·충남중간지원조직협의회 공동지역발전포럼 김태연 소장 원고 중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 중간지원조직의 연대협력에서 발췌

▶ 조정기능

- 단독 활동 단체나 지역 이해관계자의 자원을 서로 연결,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 행정, 기업, 비영리 단체 등 이해 당사자 간 협력을 조정하는 기능

▶ 정책 효과성 제고 기능

- 프로그램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선 방안 제시
- 각 단체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소통 활성화 및 성과 측정 방법 개발 기능

▶ 자원동원과 네트워크링 기능

- 지역 내외의 단체와 폭넓은 협력 관계를 맺고 목표가 동일한 단체들을 결합하여 교류, 협력을 촉진하며,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동 활동의 기회를 제공 하는 것

○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역할(Howell, 2006)

▶ 기술이전 및 확산 기능

- 중간지원조직들이 가게나 기업들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

▶ 중간지원 활동 기관의 혁신 관리기능

- 일반 대중, 기관, 산업들과의 지식 및 기술교류 촉진으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창출토록 촉진하는 기능

▶ 혁신시스템과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 기능

- 일종의 상부구조 기관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이 회원사들에게 집단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하부기업 으로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
- 중간적인 기업, 연결기관, 혁신 커뮤니티 등의 용어 사용
- 이외에도 연구지원기관, 기타 출연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도적인 중간지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책과 실행 간에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단기용역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

○ 수준 낮은 시민사회의 수행기관도 있지만 행정과의 년 단위 계약은 초기에 집행도 어렵고, 잔액을 넘기기도 어렵다

▶ 년 초에 사업 시작이 어렵다. 4월부터 시작하여 11월에 정산하게 되면 실질적인 수행기간은 8개월 정도. 서로가 바라지 않는 미미한 성과와 그로인한 세금의 낭비가 반복된다.

○ 행정과 위탁주체 사이에는 어색한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

- ▶ 책임은 위탁주체가 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다는 것.
- ▶ 계약 이외에 추가되는 업무가 있다.
- ▶ 민관 협치를 통해 기대되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창발성의 싹을 제대로 틔우기 어렵다.

○ 깔때기가 아니라 행정칸막이의 아류작이 된다.

- ▶ 위탁 주는 곳의 성향에 따라 칸막이 아류작이 된다. 옆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끼리라도 넘나들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융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 ▶ 행정 담당자라도 바뀌면 사업전체가 재조정되기도 한다.

■ 재단 설립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 재단은 만들어 놓으면 지속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 고정경비가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계륵이 되기도 한다. 인가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 깔때기 역할을 위한 토대를 마련
- 연구조직을 붙여야 한다.
 - ▶ 충남연의 사경 팀도 유명무실. 충남엔 사회적경제 연구가 없다.
- 단체장 선거 공신들의 보은인사는 안 된다.
-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꼭대기 지원기관이 되어야 한다.
 - ▶ 당사자조직, 중간지원조직, 행정을 망라한
 - ▶ 지역은 통합지원체계로, 업종은 광역단위로 전문화 지원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 관료화 되는 재단의 직원은 곤란하다.
 - ▶ 현장사회적경제기업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고용노동부
 - ▶ 현장관광두레기업 -> 관광두레 PD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 나가며

-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고, 현재 위탁운영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 센터의 존립에 대한 이견들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재단은 설립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관 협치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행정에서나, 민간에서나) 상황이지만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 협치를 복원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재단설립에 대한 오늘의 토론이 요식적인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후 재단설립 과정에 큰 쓰임일 있길 기대합니다.

토론자료

[제2회 충남 사회적경제 포럼]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재단) 설립방안 모색 토론회』

김 종 수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재단) 설립방안 모색 토론회

김종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재단의 운영원칙

- 협치: 민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관의 예산/정보/정책을 어떻게 혼합하고 만나게 할 것인가. 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어떻게 밀착형 지원을 할 것인가. 발제자들의 발제문에서도 거버넌스 구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재단은 단순히 관의 보조금을 받는 것을 벗어나 독립된 이사회를 두고 민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창구를 두고 운영되어야 함
- 포용성: 어떻게 최대한 많은 영역을 포괄하고 네트워크 할 것인가. 사회적경제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 고민 필요(도시재생, 청년창업 등 각 영역에서 떨어지는 사회적경제 국비지원 사업들을 재단에서 정보를 모으고 배분하는 역할 필요)
- 효과성: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어떻게 최대의 효과를 낼 것인가. 효과적인 전략 구상이 필요함. 이는 당사자 조직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지와 연계됨.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형성 중요

▶ 재단 운영 전략

- 융복합 및 네트워크 확장: 다양한 영역들을 연계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민의 관점에서 업종 간, 영역 간 연계전략 필요. 적극적으로 만나고 연계하고 시범사업화 해야 함
 - 관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영역 연계 ex) 도시재생, 청년, 사회복지, 마을만들기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인큐베이팅 사업 연계
 - 각 대학에서 론칭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학과 설립 움직임에 연계
- 시범사업 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한 학습과 인식의 확장을 꾀함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설립
 - 시장 연계형 협동조합 모델
 - 청년 사회적경제 조직 인큐베이팅
 - 학교협동조합 시범사업 등

- * 이 일들을 진행하는 각 단위 액션 조직들을 발굴하고 이를 성장시키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필요

○ 국비 연계 전략: 국비 사업들을 최대한 지역화 시켜내는 전략

- 사회적경제 기금 사업
-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아산 신활력플러스 사업 연계)
- 도시재생 사업 연계(주민들 협동조합화)

○ 시군 사회적경제 확장: 결국 사회적경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단위는 시군임

-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일(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중간지원조직과의 역할 배분 필요)
- 시군의 시책사업에 사회적경제 사업을 정책화하는 것(시군단위 사회적경제 조직 인큐베이팅, 판로육성 등 정책 제안 필요)
-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을 확대(충남 각 시군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연계).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에 사회적경제 인력 TO를 연결하는 전략 필요
-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시군의원들과의 연계)
-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 * 북부권과 남부권의 사회적경제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전략 수립 필요.

▶ 재단 설립 시 이슈

○ 기존 각 단위의 중간지원조직들을 어떻게 포괄하고 연계할 것인가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통합지원기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창업교육지원센터 등
- 이 중간지원조직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놔둔다면 재단의 역할을 정보의 통합과 자원의 배분(기금 포함)이라는 한정적인 것으로 제한한 필요가 있음
- 만약 기존 센터들을 전체 포함한다면 통합의 범위와 역할을 사회적경제 영역의 제 주체들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현재 충남연구원에 있는 사회적경제 연구 및 정책 생산 기능을 재단으로 가져올 것인지 논의 필요

○ 재단의 규모

-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단의 규모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는 수원의 도시재단과 같이 별도의 연구용역(현안과제를 넘어서는)을 진행하여 논의의 집중과 근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 도의회 사회적경제 연구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